

평준화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?

조전혁

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

청아정치학교 학생주임

서울교육감 출마를 저울질 중...

보완책 III: 책무성 강화

-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: 학생,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이 좋은 교육
-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. '측정-공개-평가-개선' 프로세스 적극적으로 실시. 평가에 학부모 의견 대폭 반영.
- 모든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평가앱 배포. 학교 평가, 수업·급식·학폭·안전. . . 등 전분야의 만족도 정기적으로 조사.
- 'No Child Left Behind' 적극 시행: 철저한 멘토링

고교입시제로의 회귀?

- 많은 사람들이 “평준화 정책이 **학력의 하향 평준화**를 초래했다”는 이유를 들어 비판
- 평준화 배정을 포기하고 과거와 같은 ‘고교입시제’로 회귀하는 것이 가능한가?
- 고교입시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. 거센 정치적 반발이 예상됨
- ‘평준화 배정’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

평준화 배정의 대안

-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비판의 지점은 **학력의 하향 평준화**와 **교육의 획일화**임.
- 학력의 하향 평준화 문제의 해결 방법은 '학교간 경쟁'임. *경쟁력은 경쟁구조에서 발현.*
- 교육 획일화의 대척점은 교육의 다양화임. *다양성은 학교 운영의 자유와 자율에서 발현.*

보완책 1: 드러커 프로세스

- 피터 드러커(Peter Drucker) 교수, "**측정되지 않으면 평가할 수 없고, 평가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.**"
-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, 국가의 교육 평가기능은 사실상 폐지. (학업성취도 평가, 전수조사에서 표집조사로 변경. 좌파 교육감들은 지역별 모의고사나 평가교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)
- 학력 등 주요 교육 품질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탁받은 **사회적 계약** 당사자로서 국가와 교육청이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의무

보완책 II: 학교의 자율과 자유, 다양화

- 공립화한 사학의 재사립화: 서울의 경우 320개 고등학교 중 약 2/3인 200개교가 사립학교.
- 대안학교, 홈스쿨링 등 대안교육 지원 및 장려
- 학교 밖 외부의 교육자원 활용. '교육'에서 '학습'으로 전환
- 포괄예산제도 도입.
- 한국형 차터스쿨(charter school) 제도 도입
- 민간 에듀테크 기술 및 콘텐츠 적극적 활용. 개별 맞춤형 교육 및 학습 체제 강화.

보완책 III: 책무성 강화

-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: 학생,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이 좋은 교육
-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. '측정-공개-평가-개선' 프로세스 적극적으로 실시. 평가에 학부모 의견 대폭 반영.
- 모든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평가앱 배포. 학교 평가, 수업·급식·학폭·안전. . . 등 전분야의 만족도 정기적으로 조사.
- 'No Child Left Behind' 적극 시행: 철저한 멘토링

혁신학교 평가

- 좌파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정책, 실패로 판명. 혁신학교 지정 대상학교 학부모 삭발, 근조화환 등 반발.
- 혁신학교는 학부모에게 “공부 안 하는 학교”로 낙인. 기초 이하 학력의 비중이 두배 이상, 평균 이상 학력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 낮음. (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)
- 혁신학교는 돈으로 혁신의 가면을 입히는 천박한 정책 모델. 실패를 예약
- 혁신학교가 아니라 혁신하는 학교로 전환해야 함. 지역별로 전교조 교사 100%인 혁신학교를 허용해 일반학교와 경쟁시키는 것도 한 방법.